코로나19 비상속 노동계 집회 강행 '논란'

민주노총·금속노조 광주고용노동청 앞 집회

산재사망·해고 위협 등 심각
절박한 노동자 현실 알리기
정문·남문서 90명씩 집회
지역사회 감염 불안한 시기
노동계 방역 협조 절실 지적도

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강행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산업재해와 '코로나19' 위기에 노출된 광주·전남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취지를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다소 잠잠했던 지역감염 사례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에 대한 노동계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거세다.

◇이런 상황에 꼼수(?)까지 부리며 모여야하나=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일 오후 4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각각 '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조치를 의식한 듯 고용노동청 남문과 정문으로 집회 장소를 구분하고 각각 90명씩 참가하는 것으로 집회신고를 따로 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회·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최근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 광주시 서구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해 초긴장 상태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야외 집회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노동계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엄중한 시기인 점을 감안, 사회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송파 60번 확진자의 진술 기피로 뒤늦게 광주에서만 확진자가 11명 나오고 계수초교 학생과 교직원 등 402명, 친인척의 직장 동료 등 진단 검사 802건이 이뤄지는 등 감염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발열체크, 손소독 등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오죽했으면 이랬겠나"=노동계는 "얼마나 절실하면 이같은 상황에서 집회를 열었겠냐"며 항변한다.

꼼수를 써서라도 갈수록 희생되고 해고의 위협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야하는 절박함이 컸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코로나 여파에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해고되지 않고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 등이 침해받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당장, 광주·전남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이 내놓은 '광주·전남 산업재해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만 125명(광주 72명·전남 53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66명(광주 34·전남 32)이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59명(광주 38·전남21)보다 많았다.

올해도 지난 5월 광주시 광산구 하남공단에서 20대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2018~2020년 3월)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약 80%에 달한다"면서 "이들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은 하청업체로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있는 기업이 책임을 져야 산업재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안전망이 없는 비임금 노동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비례) 국회의원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 현황' 자료를 통해 최근 5년 간 비임금 노동자가 213만명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통계를 인용, 코로나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퀵서비스·물품배달·대리운전 등의 비임금 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임금수준도 높지 않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비임금 노동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고용보험 도입 등의 정책 설계 과정에서 비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노동청 정문앞에서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전두환 재판 올해 선고 이뤄질 듯

9월 변론 마무리 예정…15차 공판 이희성씨 증인 출석 안해

2년 넘게 진행된 전두환(89)씨 재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법원이 오는 9월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는 증인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뒤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올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0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15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전씨 측은 5·18 기간 헬기 사격 지시 여부를 파악하겠다며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이희성씨는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씨 가족은 고령과 질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고 24시간 간병을 받는 점,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장사복씨는 수취인 불명으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광주에 출동한 무장헬기 부대인 육군 103항공대장(중령)이었던 장교도 폐문부재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희성 씨 등 2명에 대한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육군 제1항공여단 31항공단 502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부조종사(대위)만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1980년 5월 20일 또는 21일 새벽 가스살포기를 장착하고 비무장 상태로 광주로 출동했다"면서 "탑승한 헬기는 사격한 적이 없고 오히려 지상에서 총알이 날아올라왔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 지시 역시 주로 기장이 받았다면서도 무장헬기로 시민들을 사격하거나 위협 사격하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열리며 검찰과 전씨 측이 신청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과거 불출석했던 전씨 측 증인 중 장사복씨와 103항공대장에 대한 소환장을 한 번 더 보내고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불출석중인 전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절차는 생략될 것으로 예상돼 오는 9월 21일 변론 종결을 끝으로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올해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종제 전 행정부시장 '당원 불법모집' 혐의 부인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출석,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20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정 전 부시장측은 이날 재판에서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입당 원서를 전달한 것일 뿐 지지를 호소하며 당원 모집을 유도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 특수부가 민간공원 특혜 의혹을 별건 수사하며 공기업 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입당원서 사본 149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면서 "당시 수사와 관련성이 없는 자료라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고 임의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가 서류를 확보한 뒤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가 며칠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입당원서 사본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부시장과 함께 기소된 5명 중 고교 총동창회장 출신 안모(59)씨, 광주시 공무원 김모(53)씨, 유모(67)씨 등도 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한 기대를 갖고 권리당원을 모집했을 뿐 정 전 부시장에게 부탁받은 것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55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보조금 횡령 전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단무장

"광주시에 1억1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전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등이 횡령한 광주시 보조금 1억1500만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9단독 이수민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전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등은 1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예술감독 A씨와 전 단무장 등은 단원들 회식비, 경조사비 등에 쓸 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58차례에 걸쳐 허위로 보조금 1억1800여만원을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A씨는 이후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뒤 항소·상고했으나 지난해 2월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광주시는 이같은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공연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제작진으로 참여한 것처럼 광주시에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립극단의 경우 전속배우와 제작진을 두지 않고 공연 때마다 필요한 객원 배우와 제작진 등을 외부에서 고용해 공연을 진행했는데, 광주시는 이 때 참여한 객원 배우와 제작진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A씨 등은 업무추진비 등이 편성되지 않아 이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고 대부분 해외 공연비, 경조사비, 연습비, 회식비 등에 사용됐으며 일부는 객원 배우들에게 실제로 지급됐다며 전체 금액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등의 주장에도, 보조금을 편취한 게 불법행위가 아니라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고 광주시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예식장 직장 갑질 피해 고발 4개 시민단체 재발 방지 촉구

광주청년유니온 등 4개 시민단체는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지역내 직장 갑질 피해 사례를 고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A씨는 지난해 초부터 B 예식장측의 부당한 근로계약서 서명 요구와 퇴사 강요, 면벽근무, 따돌림, 업무배제, 폭언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A씨는 해당 예식장측 관계자의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 보호 방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 징계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고용노동부와 광주시에 대한 직장갑질 근절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